

지역질서로서 공동체 개념의 등장:

동아협동체론의 성립, 전파와 식민지 유통*

손 열**

요약

이 글은 1930년대 동아시아 공간에서 공동체 혹은 협동체란 개념이 담지하는 국제정치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의식을 담은 사회적 개념이 국제적 단위체를 구성하는 국제정치적 개념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첫째, 당시 일본정계와 지성계를 풍미한 동아협동체론이 어떠한 정치적 배경에서 등장하였는지, 왜 공동체 개념이 국제정치적 개념으로 확장되었는지, 이 개념이 어떤 정치적, 외교정책적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는 조선에서 동아협동체 유통 과정을 분석한다. 동아협동체란 1930년 일본의 전향자의 작품으로서 역설적으로 1938년을 기점으로 전향한 조선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이들에게 동아협동체의 수용문제는 세 가지 고려 속에서 제기되는 것이었다. 중일전쟁의 추이 및 파시즘 국가들과 동맹 등 국제정세에 대한 전망, 협동체론이 갖는 민족주의와 자본주의, 자유주의를 넘는 상당한 혁신성을 일본이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동아협동체와 식민지 조선의 민족문제는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판단 등이 핵심적인 쟁점사안이었다.

주제어: 개념사, 공동체, 동아협동체, 전파, 중일전쟁, 미키 기요시, 식민지 조선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3A2046903).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yulsohn@yonsei.ac.kr

I. 왜 공동체인가

공동체란 상징과 열망을 담은 언어이다. 인간관계의 친숙함, 안정감, 안전감, 상호염려 등을 담은 개념이어서 정치적으로도 유용하여 국내 정치담론에 흔히 등장할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으로도 유럽공동체, 아세안공동체, 동아시아공동체 등 국제적 연대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유통되고 있다. 공동체는 단순히 정치단위의 집합 혹은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집단이라기보다는 ‘우리의식’(we-feeling)을 갖는 집합체를 상징한다. 이 언어는 일본이 게마인샤프트의 번역어로 만든 것으로서 혈연, 지연처럼 정서적 유대에 근거한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제정치 개념으로서 회자되고 있는 ‘동아시아공동체’도 단순한 이익공유행위자의 집합으로 관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동아시아 국제정치 현실에서 이 개념이 일정하게 소비되는 이유는 갈등을 넘어 협력적 신질서 건축의 열망을 표현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하영선 편 2008).

동아시아공동체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1938년 ‘동아협동체’ 역시 그러한 열망을 담은 개념이었다. 미키 기요시(三木清)를 대표로 쇼와 켄큐카이(昭和硏究會, 이하 쇼와연구회)가 고안한 이 개념은 아시아 사회가 공유하는 게마인샤프트적 요소를 공통분모로 삼아 지역을 하나로 엮는 개념으로 창조되었다(三木清 1968). 그 배경에는 영미 중심 세계질서에 대한 반기(反旗), 혹은 서양근대 문명에 대한 저항의 의미가 자리하고 있었다(Najita and Harootunian 1989). 개인의 이기심에 근거한 자본주의적 경쟁과 무절제한 자유주의를 타파하고 대안으로서 동아시아에 내재한 공동체적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보편적 세계를 건설하려는 야심찬 지적 프로젝트이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현실 과제는 중일관계, 즉 중국과의 갈등과 전쟁이 예기치 못하게 장기화됨

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정치적 목표와 관련이 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래 1938년 무한(武漢) 점령을 분기점으로 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장기화의 조짐이 역력한 속에서 일본정부는 11월 동아신질서 건설을 골자로 하는 성명(제2차 고노에 성명)을, 이어 12월에는 중국 국민당정부와 ‘善隣友好, 共同防共, 經濟提携’를 제안(제3차 고노에 성명)하게 된다. 결국 중국 민족의 협력을 얻고 중국 민족주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고난도의 과제에 봉착한 것이다. 중국 민족주의와 일본 민족주의를 동시에 품는 일정한 보편성을 담지하는 비전이 요청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미키는 협동주의와 동양적 휴머니즘을 공동체의 컨텐츠로 삼아 동아협동체론을 제시하였다. 중일전쟁의 장기화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란 현실정책적 요청과 서구 자본주의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고 제국주의 질서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문화공간 창조란 지적 요청이 겹쳐지는 역사적 국면에서 탄생한 동아협동체는 아시아의 해방을 위해서는 일본 국내 정치경제체제의 혁명적 변환을 요구하였고, 따라서 식민지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조선의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동체론의 보편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수용하였다.

이 글은 1930년대 동아시아 공간에서 공동체 혹은 협동체란 개념이 담지하는 국제정치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의식을 담는 사회적 개념이 국제적 단위체를 구성하는 국제정치적 개념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첫째, 1938년 일본에서 공식화된 동아협동체론의 등장 배경을 추적한다. 기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고(함동주 1996; 1999; 임성모 2005) 쇼와연구회 기록집인 『昭和社會經濟史料集成 昭和研究所會資料』를 자세히 검토하여 당시 일본정계와 지성계를 풍미한 동아협동체론이 어떠한 정치적 배경에서 등장하였는지, 왜 공동체 개념이 국제정치적 개념으로 확장되었는지, 이 개념이 어떤 정치적,

외교정책적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는 조선에서 동아협동체 유통 과정을 분석한다. 동아협동체란 1930년 일본의 전향자의 작품으로서 역설적으로 1938년을 기점으로 전향한 조선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이들에게 동아협동체의 수용문제는 세 가지 고려 속에서 제기되는 것이었다. 중일전쟁의 추이 및 파시즘 국가들과 동맹 등 국제정세에 대한 전망, 협동체론이 갖는 민족주의와 자본주의, 자유주의를 넘는 상당한 혁신성을 일본이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동아협동체와 식민지 조선의 민족문제는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판단 등이 핵심적인 쟁점사안이었다. 과연 조선의 지식인들은 국제정세와 일본정세에 대해 얼마만큼 치열한 고민을 근거로 동아협동체론을 수용하였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개념의 배경: 쇼와연구회와 중일전쟁

쇼와연구회는 1930년대 중후반 활동한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의 사설자문기관이다. 당시 고노에는 차기 수상으로 손꼽히는 후보이었고 가까운 장래에 수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정책에 관심이 있는 일류 지식인들이 모여 들었다. 료야마 마사미치(獵山政道), 류 신타로(笠信太郎), 미키 기요시 등 당대 대표지식인 뿐만 아니라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당시 내각조사국장관, 요시노 신지(吉野信次) 상공차관, 아리타 하치로(有田八郎) 외상 등 정관계 및 군의 최고엘리트들도 초청되면서 당대 최고의 정책연구모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930년대는 5.15 사건이나 2.26 사건과 같은 청년장교와 우익조직에

의한 정권전복 쿠데타 시도와 암살의 반복에서 보듯이 기존 정치질서, 정당질서와 관료주의에 대한 뿌리 깊은 의심과 강렬한 반감이 조직적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국내적 변화는 만주사변과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에 따른 국제적 고립, 세계경제 불황과 보호주의 고양 및 경제의 블록화 현상, 중국의 반일민족주의 고양 등 대외적 이슈와 밀접히 연계되어 현상타파와 신체제 건설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분출시켰고, 농본주의와 군국주의 파시즘 등 극단주의적 사고가 횡행하는 사상적 혼란을 야기하였다. 이런 시대적 맥락에서 고노에는 “러일전쟁 직전 일본은 국내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적어도 영국과의 동맹과 러시아와의 대결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존재하였던 반면 1936년 당시 국내 여론은 깊이 분열되어 있고 도시와 농촌, 육군과 해군, 군인과 외교관 간 심각한 불신과 대립이 존재하여 깊이 고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술회하며 지적 리더십을 통한 정확한 국내외 형세판단과 이에 근거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Crowley 1971, 323).

1936년 가을부터 매주 모임을 가진 쇼와연구회는 “현재 일본의 여러 불안요인은 대외문제에 기인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국제문제 토론에 역점을 기울였다. 그 본격적 출발점은 1937년 3월 다카하시 가메키치(高橋龜吉)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국책수립의 근본문제와 관점”과 “일본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란 두 발제문과 세계의 대세에 대한 토론이었다(昭和社會經濟史料集成 第31卷 2004, 187). 만주국 건설,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 만주사변 이래 중국정부, 소련, 영미와 외교적 갈등관계 등은 기존 국제평화체제의 근본적인 약점의 결과라 평가하고, 현재 일본은 안정된 세계질서를 만들어가는 고통스런 과정에 직면하여 국내개혁과 독자적 외교정책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적 자유주의와 베르사이유 조약체제가 파탄의 길을 걷고 대공황 이후 과격한 경제적 민족주의가 횡행하는 세 가지

시대의 조류를 강조하면서 현재 정치지도자들은 현상유지의 구습에 젖어 신세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내적으로는 계획경제와 정치체제 개혁, 대외적으로는 대중 온건정책의 추구를 제안하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의 식민지질서를 벗어나서 동남아와 필리핀, 난징(南京)정부의 민족주의 운동을 지원하고 중국에서 군사력에 의존하는 정책을 피해야 비로소 아시아에서 일본의 지도적 위치가 확보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학자로서 다카하시다운 진보적 제안이었다.

이후 정책논의의 초점은 중국문제로 모아졌다. 쇼와연구회의 취의서(就意書)가 “支那問題를 중심으로 하는 内外諸問題에 관해서 緊急對策의 樹立 및 根本方策의 討究에 노력하여 適宜 정부 기타 關係方面에 建言”한다고 명확히 기술한 데 따라 ‘支那(중국)문제연구회’가 설치되어 난상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昭和社會經濟史料集成 第31卷 2004, 48). 4월 6일 제1차 회의에서 다나카 카나에(田中香苗)는 중국의 통일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면서 장제스의 난징정부의 부상은 중국 민족주의의 결과이며, 만주사변 이래 유럽 열강들이 과거 중국의 분열정책을 버리고 난징정부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통일을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만 난징정부의 군사적, 경제적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중국의 통일은 이상에 불과하지만 중국 민족주의는 일본을 겨냥하고 있고 특히 영국과 소련이 이런 방향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은 반식민지 상태이고, 난징정부는 열강의 후원 하에 반일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통일을 추구할 것이며 그 사상적 기반은 중국 민족주의라는 것이다(昭和社會經濟史料集成 第31卷 2004, 189).

4월 22일 제2차 회의에서 호리에 무라이치(堀江邑一)는 중국문제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내어놓는다. 현재 중국문제는 제국주의, 특히 제1

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자본주의가 야기한 현상으로 보았다. 전후 세계 자본주의의 여러 모순 즉, 발전의 불균형이 제국주의 식민지 요구를 강화시켜 열강의 중국 진출을 촉진하였고, 이에 대해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며 기존의 세력균형을 무너뜨렸으나 만주경영에 한계를 노정하고 국내정치적 혼란으로 열강이 반격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중국진출에 대한 내부역량의 한계와 열강세력 간의 균형점 사이에서 중국의 민족주의 발흥과 근대국가화가 진전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열강의 중국개입과 지원을 차단하는 한편 식민지자본주의의 한계를 넘는 내부역량을 키우는 일이라 주장한다(昭和社會經濟史料集成 第31卷 2004, 208-209).

이렇듯 중국문제를 거시구조적으로 인식하고 그 해법을 고민하던 쇼와연구회는 7월 노구교 사건을 계기로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래, 8월 중국공산당이 항일구국 10대강령을 발표하고, 9월에는 항일민족통일 전선이 결성되었고, 일본군이 항저우에 상륙하여 전선을 확대, 12월에는 난징을 점령하는 등 일련의 급박한 사태가 이어지자 난처한 상황을 맞게 된다. 일본 정부가 중일전쟁의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가운데 일련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제기되는 질문들, 예컨대 일본은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서양의 영향력을 축소하고자 하나 과연 이러한 목표를 중국의 반일정세가 고취되고 적대적 상태가 지속되는 속에서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중국을 설득하여 서양 제국주의 및 공산주의와 싸우게 할 것인지, 만일 중국과 장기전의 늪에 빠져들어 오히려 서양에 대한 군사적 준비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면 중일전쟁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전쟁은 어디서 멈추고 어떤 전후 질서를 위한 타결이 필요한 것인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정리되어야 했다.

쇼와연구회는 중일전쟁이 지역질서가 갖는 구조적 문제들을 증폭시

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쇼와연구회 내 중국문제의 대표전문가인 오자키 호츠미(尾崎秀実)는 열강의 개입, 특히 영국에 주목하면서 영국의 대목표는 중국의 통일과 안정된 시장에 있기 때문에 중국내 공산주의의 위협보다 일본의 경제적 침투를 더 우려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昭和社會經濟史料集成 第31卷 2004, 247-262).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전선이 확대되는 배후에서 영국은 중국에서 권익을 지키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였고 일본 내에서는 반서양 제국주의로서 배영(排英)운동이 고취되었다. 또한 소련의 개입 역시 즉각적이었다. 장제스 정부가 소련의 지원을 요청하자 소련은 인민전선 수립 차원에서 군사지원을 하게 된다. 이렇듯 영국과 소련이 중국과 협조하려는 움직임 자체는 일본에게 심각한 전략적 딜레마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었다. 일본으로서는 다행스럽게도 구미 열강들이 일본에 구두 비난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련 역시 중국이 요청한 군수물자의 반 정도만 제공하는 등, 열강은 중일관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여 일본과의 대결상황을 원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장제스 정부는 1931년 만주사변 당시와 달리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더 나은 여건에 있었고 일본은 보다 더 고립된 상태이었다(Iriye 1989, 42-43). 따라서 장제스 정부의 결연한 의지와 반발로 소련이 지원하고 독일이 중재역을 맡게 되면서 열강의 간섭을 배제하고 전쟁을 국지적 이슈로 한정하려는 일본의 정책은 여의치 않게 된 것이다.

1938년 1월 16일 고노에 내각은 국민당정부와 상대하지 않겠다는 선언 - 이른바 제1차 고노에 선언 - 을 함으로써 전쟁의 조기해결 가능성이 어려워졌다. 사실 고노에 자신은 내각 수상에 오르면서 국내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고 중국과 전쟁을 원하지 않았으나 노구교 사건으로 전쟁에 말려들어가면서 강경자세를 견지해왔다. 따라서 쇼와연구회는 전쟁으로 인해 고립되어 가는 일본의 지위를 변경하기 위

한 구체적 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지나(支那)문제연구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본의 대륙정책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실천적 정책개발에 나섰다. 1938년 5월 “支那事變에 對處하는 根本方策에 對하여”란 보고서는 “현재 支那事變(즉, 중일전쟁)의 해결은 일본의 전 국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문제...우선적으로 급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백년의 후회를 남기는 위험한 지점”이며, 이는 모든 대륙정책의 선결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해결을 위해 모든 국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昭和社會經濟史料集成 第31卷, 452). 이 진단에 따르면 중일전쟁 장기화의 원인은 소련의 중국적화정책과 중국의 항일국민운동의 지원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일본의 대륙정책의 최종 목표는 소련과의 전쟁이 된다(昭和社會經濟史料集成 第31卷 2004, 458). 역으로 일본의 중국정책의 성공은 소련과의 전쟁에 대한 선결조건이므로, 이런 맥락에서 일본은 난징정부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중국에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하는 정치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일본과 만주국, 북중국 간 정치경제 블록을 구축하여 하나의 통일된 중국을 건설하여 소련에 대항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 영국정책은 중국의 화남과 화중에서 영국의 권익을 보장하는 대신 화북에서 손을 떼게 하고, 반(反)공산주의 연합을 획책하여 영국과 소련 간 관계개선을 방지하는 외교책이었다. 강력한 군사적 행동으로 중부와 남부를 장악하고 한커우 산업단지를 획득하면 열강이 중국지원을 포기하게 되고 따라서 국민당정부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나사변 수습의 일반적 방침 및 목표(1938년 6월)” 보고서는 일본 외교의 당면 목표로 “지나사변이 세계전쟁으로 전화할 위험을 극력방지”하는 데 두고, 두 가지 안을 제시한다. 제1안은 국민당정부를 중국 유일의 중앙정권으로 인정하고, 북중국 임시정부와 중중국 유신정부

를 설립, 국민당정부는 북중국의 완충지대화, 만주국 승인, 방공협정 참가, 배상금 제공 등을 제시, 제2안은 국민당정부를 상대로 사변 수습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당정부 타도에 매진하며 일본군의 점령지역에 임시 유신정부 발전조성에 노력한다는 안이다(昭和社會經濟史料集成 第32卷 2005, 479-482). 쇼와연구회는 국민당정부를 수용하는 제1안을 지지하였다.

문제는 중국에서 국민당정부를 품는 신질서 수립을 위한 정책을 짜는 일이었다. 국민당 정부와 우호관계 수립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국 민족주의와 서구 제국주의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독점자본가와 시대착오적 군국주의자들이 장악한 질서 속에서 확대일로의 전쟁에 필요한 군사력을 지탱할 경제계획 프로그램이 부재한 현실에서 오는 불안을 불식하고 초기에 품었던 희망을 되살려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연구회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게 된다. ‘신사상’의 필요성이 그것이었다. “중화민족 개개의 문화, 특히 중국과 일본에 공통된 문화를 존중하고 동양문명 및 동양정신을 부흥시켜 일중 협조를 촉진”하고 “신정권의 정책을 추진할 일중협조 실현의 기초가 되는 사상을 확립” 해야 한다는 것이다(昭和社會經濟史料集成 第33卷 2006, 58).

Ⅲ. 개념의 창조: 미키 기요시와 동아협동체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이가 미키 기요시(三木清)이다. 미키는 제1고등학교 시절부터 “空前의 秀才”로서 이름을 떨쳤고 당시 지성계를 풍미한 니시다 키타로(西田幾多郎)를 흠모하여 도쿄대학이 아닌 교토 대학 문학부에 진학하여 철학공부에 매진하였다. 독지가의 도움으로 하이델베르크, 마부르크대학에서 수학하여 하이데거를 만났고 이후

호세이(法政)대학 교수가 되었다. 신칸트주의로 시작하였으나 맑스주의에 심취하여 문필활동을 진행하다 1930년 투옥, 이후 전향(轉向)하여 요미우리신문 칼럼니스트로 활약하며 필명을 떨치다 1938년 쇼와연구회에 가입 요청을 받게 된다. 미키는 문화연구회의 좌장이 되어 문화 차원에서 중국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곧바로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

그는 “중국에 대한 일본의 군사행동은 동양의 화평과 양국의 우호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란 정부의 공식견해에 동조하면서 “일본이 중국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사상이란 수단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며... 정신은 양국관계의 사상의 기초가 된다... 영향권을 아시아대륙에 확대하는 이 시점에서 일본문화가 응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이다”라고 하여 문화적 차원에서의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단기간에 중국을 무력으로 굴복시킬 전망이 희박한 가운데 중국의 민족적 통일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일본 중심의 체제하에서 중국민족주의와 일본민족주의를 융화하려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미키의 전략은 양국 간 전쟁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는 전쟁을 통해 동아의 통일을 실현함으로써 진정한 세계의 통일을 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유럽문명, 유럽중심주의 비판으로 시작한다. “유럽이 세계이며 유럽문화가 문화이고 유럽사가 곧 세계사 그 자체”라는 종래 인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근대적 원리로서 자유주의가 민족주의나 파시즘의 도전에 직면하여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을 지적한 후, 세계사의 새로운 이념으로 등장한 공산주의 역시 “만일 독일에서 공산당이 성공하였다면 세계의 통일적 이념이 되었을 것이나 자유주의 및 파시즘과 대립 투쟁하는 상태이므로 세 이념을 넘어 세계를 적극적으로 통일하는 사상을 만드는 과제”가 주어지는 것이다(昭和社會經濟史料集成 第33卷 2006, 60). 그동안 유럽(서양)중심주의 속에서 동양은

“서양과 달리 공통의 종교도, 공통의 정치형태도, 공통의 문화도 갖지 않은 거의 내면적 통일이 없는 세계”로 규정되어왔다(昭和社會經濟史料集成 第33卷 2006, 61). 그러나 동양의 통일은 “일본이 수행할 것인가, 지나가 수행할 것인가 알 수 없지만 이제 세계사적 단계”에 와 있으며 이런 점에서 중일전쟁이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키에 의하면 중일전쟁은 중국의 침략이란 현실인 동시에 서양 제국주의의 구속으로부터 중국을 해방시켜 동양의 통일을 이루는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 즉, 전쟁은 무력을 통한 침략으로 시작하였지만 그 현실 속에서 새로운 문화적 통일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는 기왕의 세계사는 유럽사에 불과하여 그 보편성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후, 진정한 세계사는 동양과 서양 양자의 변증법적 초월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서양 구분의 이분법 체계 즉, 서양과 대비되는 동양 독자의 이념적, 문화적 특질을 찾아 동양 통일의 근거를 찾는 작업이 필요했다(함동주 1996, 176).

미키는 여기서 공동체 개념을 동원한다. 서양 사회의 특성은 계층사회인 데 반해 동양사회는 계마인사회라는 것이다. 그는 이를 각각의 휴머니즘 즉, 서양의 휴머니즘은 개인주의에 기반한 이익사회적인 성격의 것이고, 동양적 휴머니즘이란 공동사회의 인륜적 기반이 강조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昭和社會經濟史料集成 第33卷 2006, 112). 서양이 그리스문화, 기독교문화, 근대과학 등을 공통기반으로 하여 통일적으로 발달해온 반면 동양은 이에 상응하는 통일성을 찾기는 어렵지만 사상적 공통성이 아닌 생활양식의 공통성 즉, 자연으로 연결되고 황색인종이면서 관개농업, 도작(쌀농사) 위주의 생활에서 나오는 공동체적 특질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미키는 당시 일본 지성계를 풍미한 문화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Najita and

Harootunian 1989). 문명개화를 충실히 추구하는 속에서, 상실의 위기에 있는 일본의 문화에 주목하여 일본적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지적 노력이 그것이다. 곤도 세이키, 다치바나 고사부로 등은 문명이란 개념을 단지 구미의 물질적 진보와 인간적 저급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반면, 문화는 창조적 자기실현의 의미로 받아들인다. 이 변화는 일본이 서양제국주의로부터 간섭의 제거와 역내 패권적 지위의 확보란 정치적 과제를 추구해야 하는 정치경제적 조건과 함께, 급속한 문명화, 산업화 과정에서 이른바 “일본적 정신”의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란 문화적 조건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른바 농본주의는 오래 전 과거의 공동체적 기원으로 전회하여 연대와 협동의 가치에 기반한 사회를 이상향을 꿈꾸는 담론체계를 만들어 내었다.

미키의 공헌은 공동체를 일본으로부터 동아시아의 수준으로 확장하면서 보편성을 부여하고자 한 데 있다. 동아시아의 구성원들이 서로 이익과 감정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동의하는 문화적 요소가 발견되어야 하며, 이런 점에서 그는 일본의 특수성만을 강조하는 종래의 일본문화론에 중대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중국정신과 결합하여 양자를 초월하는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과 관계없이 향후 일본의 성립은 불가능하다. 일본 고유의 것을 중국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완전히 무의미하며 불가능하다. 중국과 일본의 진정한 결합 없이는 동양이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계사적 의미에서 중일체휴 혹은 일만지(일본-만주-중국) 일체라는 것은 이제까지 실현되지 못했던 동양의 통일을 시나사변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된다(昭和社會經濟史料集成 第33卷 2006, 64).

그는 일본문화 속에 새로운 보편을 창조할 만한 요소가 담겨져 있음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일본문화의 우수성은 외국문화의 영향을 흡

수, 결합하는 능력, 즉, “形이 없는 주체적 문화”로서 구미의 기술을 흡수하고 고도화하여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군사력을 갖추게 된 데서 증명된다. “일본문화가 외부에 진출하려면 여타 민족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일본문화가 形이 없는 것을 넘어서 形이 있는 객관적이고 새로운 문화로 발전해야 한다.” 이러한 귀결로서 제시한 구상이 동아시아의 게마인샤프트론 혹은 동아시아협동체론이다.

계셀샤프트와 대조되는 게마인샤프트적 성격을 갖는 조직으로서 이는 민족적 전체가 아니라 민족을 초월한 전체이다. 따라서 동아시아협동체의 결합의 원리는 민족주의적 전체주의자가 말하는 단순히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단순한 계셀샤프트적 합리성에 의해 고려되는 것도 아니다. 동아시아협동체는 민족을 초월한 전체로서 그 결합의 기초는 피와 같은 비합리적 요소가 아니라 동양문화의 전통과 같은 것이다...민족은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역사적 개념이다. 민족은 역사적으로 생성되고 역사적으로 발전한다. 전체주의가 민족적 전체로부터 동아시아협동체란 민족을 초월한 전체로 발전하는 경우, 합리성의 요구는 점차 확대되고 따라서 전체가 단순히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으로 변해가게 된다. 동아시아협동체란 전체는 개방적으로 여러 민족들을 포함해야 하며 여러 민족이 각각의 개성과 독자성을 잃지 않고 자기의 발달을 성취해야 한다. 요컨대 협동체란 계셀샤프트보다는 게마인샤프트이고 따라서 근대적 자유주의의 원리가 아닌 전체주의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昭和社會經濟史料集成 第33卷 2006, 65).

미키는 동아시아에서 게마인샤프트의 사상원리로 협동주의를 내어놓았다. 중국의 민족주의로서 삼민주의와 일본의 민족주의로서 일본문화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강조하는 일본주의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이를 넘어서는 협동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협동주의는 중일 양국의 민족주의를 변증법적 종합인 동시에 서양과 동양의 종합을 지도하는 이념인 것이다(미키 1997). 미키는 협동주의를 통해 자본주의와 봉건제를 초

일하는 새로운 게마인샤프트 창조를 주장한다. 이는 구미의 기술과 동양적 휴머니즘을 융합한, 개인은 자기의 이익보다 전체의 복지를 우선하는 아시아적 사회편성양식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협동체는 국내 개혁의 지도개념이기도 하다. 그는 “일본의 지도하에 성립되는 동아협동체 속에 일본 자신도 포함되므로 일본도 협동체의 원리에 따라야 하며 그 민족주의적 제한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처럼 동아협동체를 통해 일본의 국내 개혁을 정조준하고 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대체하는 즉, 자본주의의 폐해와 계급투쟁을 넘어 일본인의 생활에 광범위하게 침투해 있는 관료주의에 저항하는 개념으로서, 개인의 자발성과 창조력은 인정하되 전체의 입장에서 계획성을 강조한다. 자유주의를 넘어서 “공동체적 중민정(衆民政)”을 주장함으로써 유럽 파시즘국가에서 보이는 협동체국가를 수용하고 있다.

동아협동체는 당시 국제질서의 대세인 지역경제블록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소련 등이 자급자족적 지역을 만들어가고 있는 속에서 열강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어 동양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지역공간을 건설하려는 시도이었다. 그러나 이는 경제를 넘어 정치, 문화적 공동체이기도 하였다. 쇼와연구회 핵심인물인 로야마 마사미치는 “일본적인 것,” “중국적인 것,” 그리고 “동양적인 것”을 보다 고차원적으로 통일하는 문화개념으로서 즉, 문화공동체로서 동아협동체를 규정한 바 있다.

한편 이러한 시도는 직접적으로는 중국문제 즉, 단기간에 중국을 무력으로 굴복시킬 전망이 희박한 상황을 탈피하여 중국을 일본 중심의 공간에 편입시키려는 즉, 중국의 민족적 통일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일본 중심의 신체제에 편입하도록 일본민족주의와 중국 민족주의를 융화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키는 중일전쟁

의 세계사적 의미를 구미 자본주의(영리주의)와 근대주의(자유주의, 개인주의, 합리주의)로부터 일본과 아시아를 구출하는 것으로서 전쟁을 통해 아시아의 단합과 통일을 기하며 일본은 중국의 근대화를 돕는 동시에 근대자본주의의 폐해로부터 새로운 문화로 나아가도록 공진하고자 제안한다.

쇼와연구회는 미키의 협동체론을 내걸고 ‘동양의 부흥’을 향한 일종의 협동, 신질서 건설에 대한 열국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대중정책의 쇄신을 요구하였다. 이런 연구회의 입장은 1938년 11월 3일 유명한 고노에 수상의 연설(제2차 고노에 성명 혹은 이른바 ‘동아신질서’ 성명)로 이어진다. 전쟁에 보편성을 가진 도의적 목적이 필요하다며 중일전쟁의 목적을 “동아의 영원한 안정을 확보할 신질서의 건설에 있다”고 정의하고 신질서를 통해 세계사의 신단계를 창조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 성명은 중국측에 대해 “동아신질서 건설의 임무를 분담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국민당정부가 근본적 개혁을 실현한다면 일본은 중국재건에 국민당정부가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이는 고노에 내각이 1938년 1월 16일 발표한 “국민당정부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성명(제1차 고노에 성명)을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고노에는 중일전쟁의 의미와 해결책에 대해 미키와 인식을 같이 한 것이다. 이 연설문의 작성자인 나카야마 유(中山優)는 1개월 전 쇼와연구회 지나사변대책위원회가 제시한 지침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노에 제안(즉, 제2차 고노에 성명)의 핵심은 미키가 주장하듯이 국민당정부를 지역공동체에 통합하는 정책으로 중국 민족주의를 다루어가겠다는 점이다(Fletcher 2011, 123).

동아협동체론은 중일전쟁기 일본이 시도한 유일한 사상적 창조노력이라 할 수 있다.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미키를 비롯한 일본의 최고 지식인과 관료가 모여 내어놓은 성과이자, 전

통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를 통합하여 국제적으로 호소하는 보편적 메시지가었다. 결국 그 성패는 일본이 발신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메시지의 호소력에 달려 있었다. 쇼와연구회의 핵심멤버 오자키 호츠미는 “동아협동체론을 발생시킨 가장 깊은 원인은 중국문제를 재인식하게 된 점”이며 동아협동체의 성패는 중국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 있는 것이라 보았다. 중국이 끈질기게 저항하는 근저에는 항일통일전선에서 보듯이 강렬한 민족주의가 자리하고 있는데 동아협동체가 이를 정면에서 풀어가지 못하면 결국 신비주의적 결정론으로 끝날 것이라 단언하였다(오자키 1997). 오자키 등 쇼와연구회 주요 인물들은 중일전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자신의 내부혁신 즉, 동아협동체를 주도하는 일본의 협동체국가 건설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자키 호츠미는 중국 내에서 동아협동체를 진정으로 고려하는 이들은 일본의 ‘국민재편성’ 문제의 진척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일본 국내의 개혁이 실행되어 협동체론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중국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IV. 개념의 전파: 식민지 조선에서 동아협동체의 수용

1938년 11월 동아협동체가 일본정부의 공식 담론으로 등장하자마자 식민지 조선에서는 불과 한 달 남짓해서 동아협동체의 수용에 대해 엇갈리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윤치호 등 열렬한 반공주의나 민족주의 그룹은 자본주의 체제와 민족주의 극복이라는 혁신적 내용을 담은 일본 내 좌파세력의 주장이란 점에서 사상적으로 의심을 품고 있었다. 비근한 예로서 『삼천리』 1939년 1월 특집호의 특별좌담회에서 다수의 논자들이 동아협동체론의 혁신성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한 까

닭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광수와 현영섭 등 황도(皇道)를 생활원리로 한 이체동심(異體同心) 혹은 철저일체(徹底一體)론을 주장하는 당시 주류 지식인들은 양 민족의 자립과 협동을 추구하는 정책에 비판적이었다. 반면 이 특집호에서 동아협동체론을 전면적으로 지지한 김명식, 인정식, 차재정 등 당대 필명이 높았던 지식인들은 흥미롭게도 1930년 전향한 미키의 이론을 주도적으로 수용한 전향자이었다. 홍종욱(洪宗郁 2011)에 따르면 조선의 전향은 단순히 일제 공권력의 탄압과 사회주의자의 굴복으로 보기보다는 중일전쟁을 전후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란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일본의 국제적 지위 상승,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소련식 사회주의에 대한 회의라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1930년대 초 만주사변을 겪으면서 일본에서 대량 전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민족’이란 장벽에 있었다. 이 시기 일본의 사회주의자들이 계급에서 (일본)민족으로 전향하였다면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은 ‘민족’ 때문에 - 즉, 민족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 전향하지 못하였다(洪宗郁 2011). 그러나 1930년대 중반을 넘어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사회주의자들은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을 둘러싼 기본적 대립을 국제적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파시즘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양자 대결로 보고, 조선민중의 장래는 일본과 소련간의 세력균형의 변화 여하에 따라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1935년 코민테른이 반파시즘 인민전선을 들고 나서는 가운데,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을 둘러싸고 영국과 이탈리아 사이에 대립전선, 독일의 오스트리아 합병을 둘러싼 영불과 독일 사이의 대립 전선 등이 형성되면서 일본이 독일, 이탈리아 편에 서서 도발할 경우 국제 반파시스트 전쟁이 전개되고 따라서 일본이 파멸의 길을 걸을 것이란 희망 섞인 전

망이 가능하였다(홍종욱 2009).

사회주의자들은 일·소 개전을 기대하면서 소련의 지원 하에 조선혁명을 일으켜 일본을 몰아낸다는 희망을 품었지만, 막상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이 승승장구하며 대부분의 해안지역을 장악하게 되고 소련이 일본에 대해 평화외교를 전개하자 절망하게 된다. 소련은 중국과 반파시즘 인민전선(popular front)을 형성하여 중국정부를 지원하였지만 당시 일국사회주의론 하에서 경제개발계획을 완수하는 데 국력을 경주하는 한편, 유럽에서 독일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어서 일본과 전면전을 회피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스탈린은 장제스의 수차례에 걸쳐 참전요청을 일관되게 거절하였다(李玉貞 2006). 영국도 국민당정부를 지원하였으나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는 행보를 취하지는 않았다. 1939년 독·소 불가침 조약 체결은 그나마 남아 있던 반파시스트 인민전선전술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는 사건이었다. 카프측, ‘조선프로레타리아 예술가동맹’(Korea Artista Proleta Federatio, KAPF) 출신 백철은 “時代的 偶然的 受理”라는 표현을 쓰며 “지금 동양의 현실은 우연(중일전쟁)에 의해 만들어진 거대한 사실”이므로 선악을 떠나 이를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事實의 受理”를 피력한 바 있다(洪宗郁 2011, 64). 중일전쟁이란 세계사적 사실 즉, 이제 일본의 성장을 막을 세력이 없으며 결국 일제가 제시하는 정책과 구상 속에서 최소한의 희망과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 대안임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1938년 10월 일본군이 무한(武漢)과 광둥(廣東)을 점령함에 따라 국민당정부가 대륙의 주요부를 잃고 서남부, 서북부 내륙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자 전향자들은 사실의 수리 속에서 동아협동체를 일제히 내걸게 된다. 제국의 중심부 지식인들이 전선의 교착과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위기의식의 발로로서 동아협동체론을 내어 놓으며 신질서를 건

설하려는 때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은 전쟁이 결정적 분수령을 넘은 것으로 해석하며 신질서 건설에 나서고자 했다. 전쟁의 전개에 대한 결정적 인식의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삼천리』의 1939년 1월 “동아협동체와 조선” 제하의 특집호에서 전향자인 필자들은 중일전쟁의 정세가 결정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았다. 그 첫 주자인 김명식은 일본의 승리를 낙관하였다.

[일본은] 이미 군사적으로 승리하고 또 정치적으로 支那의 면목을 一變케하여 경제적 基礎工作이 전개됨과 함께 문화적으로 신생활의 협동이 실현되고 있으니 이것은 어느 상대방에서 질겨하지 아니하여도 또는 어느 제3국에서 음으로 양으로 저지하여도 제국의 既定方針과 같이 실현될 것은 부연할 필요가 없다(김명식 1939a, 48).

김명식은 식민지 초기 조선 사회주의운동에 적지 않은 발자취를 남긴 좌파지식인으로서 1938년 전향하여 역사에서 잊혀진 인물이다. 1892년생으로 한성고보를 졸업하고 와세다 정경학부에서 수학 중 신아동맹단의 핵심단원으로 활동하고 귀국 후, 동아일보 논설반원으로 『新生活』 발간, 사회혁명당 창립멤버 등으로 활동하다 1922년 필화 사건으로 조선 최초로 사회주의 재판을 받고 복역 중 가혹한 고문에 따른 형집행 정지로 출옥하였다. 그는 1920년대 레닌 등 사회주의이론을 소개하면서 식민지 사회경제적 성격 논쟁을 주도하였고, 석방 이후 오사카로 건너가 병치료를 하면서 노동운동 지도 활동을 한 이유로 재차 검거된 후 잔여 형기를 복역하고 석방되었다. 1930년대 초반에는 민족의 전통에 대한 관심으로 단군연구를 통해 조선연구의 국수주의적 성격을 비판한 바 있고, 1934년 이후에는 국제정세 논평을 써왔으며 1936년 말 오사카에서 귀국하여 1년여의 잠적과 모색기를 거친 뒤 1938년 말 동아협동체와 함께 전향, 논단에 재등장하게 된다.

김명식이 동아협동체론을 적극적으로 설파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연방’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일본이 식민지가 아닌 협동체를 건설한다는 성명으로부터 그는 연방제 도입이 유력하다고 전망하였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협동체 개념으로 설정한다면 이를 내선(일본-조선) 간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타자성을 존중하는 공동체의 건설이란 구체적으로 연방의 형태가 될 것이라 본 것이다. 따라서 조선은 협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新東亞의 聯邦問題는 人類史에 있어서 新紀元”이므로 “이제 우리는 新東亞協同體의 건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운명의 제1보를 개척”하자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建設意識”이 요구되는데, 그는 중일 사이에 끼어 있는 조선의 중개역할을 제안하고 있다. 조선이 “日支兩民族間에서 調和役”을 수행하고, “이 任務를 다 함에 있어서 兩民族의 誤解를 사는 일이...解消되지 않으면 新東亞建設에 寄與함이 있지 못할 것이니 그리되면 다음 新東亞聯邦問題가 생긴다 하여도 우리의 處地는 好轉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역설한다(김명식 1939a, 49-50).

김명식은 또한 미키가 주창한 민족개념 즉, 민족이란 혈연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라는 의식, 따라서 민족적 배타의식과 같은 “近代國家的 民族思想”으로부터 탈피하는 새로운 민족 개념에 기대를 걸면서 조선이 제시할 구체적 방향으로 “정치적으로 데모구라시, 경제적으로 고렉피브, 사회적으로 휴매니즘”으로 구성되는 “이상주의”를 제안하고, 세계성을 갖는 신건설을 내걸면서 동서양 구분보다는 초지역적 시대이식의 수립을 내세우고 있다(김명식 1939a, 51). 또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모두 반대하고 그 대안으로서 통제경제 확립을 지지하면서, 이를 통해 ‘공정가격’을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평가하여 실시하고, 토지의 국가관리 등을 통해 “日滿支 불록” 전

체의 통제경제 강화 틀 속에서 경제이득을 기하고 독립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기고자인 인정식 역시 사회주의자로서 검거와 투옥을 반복하다 1938년 10월 무한, 광동의 함락 시점에서 출옥한 직후 전향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그 역시 국제정세가 일본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동아협동체를 수용하고 있다.

日本帝國을 經濟上, 政治上 唯一絶對의 盟主로 하는 東亞의 再編成 過程이 실로 놀란 만한 空前의 大規模와 未曾有의 速度로 進行되어... 새로운 大勢를 逆轉하는 것은 絶對 不可能[하며] 武漢의 함락은 抗日 運動에 대한 최후의 결정적 타격이어서 [전쟁은] 확실히 새로운 단계에 進入하고 있다...從來의 長期戰爭에서 今後의 長期建設에로의 履行하고 있다(인정식 1939, 54).

여기서 그는 일본의 혁신세력 즉, 쇼와연구회의 작업을 높이 평가하며, “동아협동체의 원리가 민족문제-식민지문제 해결에 대해 새로운 광명을 던지고 있다”고 평가한 후, 세 가지 건설과제, 첫째 경제적으로 “東亞各民族의 共存共榮을 基調로 하는 日滿支‘뿌력’經濟의 確立,” 둘째 정치적으로는 “東亞協同體 혹은 東亞聯邦體의 結成,” 셋째 문화적으로 유럽문명과 차별적인 “東亞民族共通의 文化確保”를 제시하면서 이를 “空前의 偉대한 使命을 遂行”하는 “歷史의인 聖戰”이라 미화하였다(인정식 1939, 55).

인정식은 동아협동체 실현과 당시 총독부가 추진해 온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양립해야 하는 현실에 주목하였다. 그는 “일본제국의 臣民으로서의 충실한 任務를 다할 때만 조선민중에게 生存과 繁榮과 幸福을 約束”하는 것이며 “여기에 朝鮮人의 運命에 관한 問題에 있어서의 넘을 수 없는 限界가 있는 것”이라 하여 결국 “내선일체(內鮮一體) 이

외의 一切의 路線이 한갓 迷妄에 不過”함을 강조한다(인정식 1939, 56). 동아협동체가 조선의 자주를 확보해 주는 방안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반면, 일본제국 혹은 동아협동체 속에서 조선이 차지하고 있는 대륙병참기지(大陸兵站基地)로서의 위치를 활용하는 데 주안하고 있다. 일본제국이 중일전쟁을 통해 전선이 확대되면 병참의 역할이 내지(즉, 일본)뿐만 아니라 조선으로 확대될 것이므로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제국 내에서 조선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일본이 대륙으로 나아가는 요충지로서 중공업, 특히 군수공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조선사회의 내부적 모순을 완화하고 농촌의 과잉인구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대륙으로 진출하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은 첫째, 근대적으로 잘 조직된 산업예비군을 준비하고 “農工並進”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정신적으로는 “內地人과 同等한 國民的 義務를 다하게 한 후 內地人과 同等한 政治的 資格을 賦與”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내선일체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인정식 1939, 60). 예컨대, 그는 국민적 의무로 만주국에서 지원병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환영하면서 조선이 징병제를 획득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나아가 징병제의 전제인 의무교육 실시도 내지연장주의, 내선일체의 구현 차원에서 주장하고 있다(인정식 1939, 63).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전향을 하는 데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바로 내선일체이었다. 특히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조선인을 일본의 전쟁에 직접 동원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내선일체의 요구도 점차 강화되었고 따라서 전향자들은 내선일체를 수용하는 명분을 만들어야 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제정세의 예기치 않은 변화는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명분을 가져다주었다. 중일전쟁을 통해 동아시아 질서가 재편되어 일본이 주장하는 지역공동체가 형성된다면 일본 제국의 중심적 위치가 강화되는 한편 조선의 지위도 그 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면서 격상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내선일체 정책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다. 특히 김명식은 조선의 경제적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日滿支 블록경제”가 구체화되는 속에서 조선의 존재가 무시되지 않도록 블록 속에서 독자적, 특수적 지위를 확보하여 지역블록 건설의 일원으로 참가자격을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김명식 1940). 인정식, 차재정, 서인석 등은 내선일체라는 국민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신질서 속에서 조선의 가능성을 기약하는 길이라 보았다. 이들 전향자의 내선일체론은 당시 조선총독부가 조선인을 일본의 전쟁에 직접 동원하는 논리로서 양 민족의 “동화(同化)”론이라기보다는 동아협동체 틀 속에서 양민족이 공존공영하는 새로운 관계를 의미하는 이른바 “협화적(協和的) 내선일체론”으로 지칭된다(洪宗郁 2011). 내선일체를 일본민족과 병립과 협동으로 이해한 것이다.

조선에서 동아협동체론의 유통은 제한적이고 또 짧았다. 전향 사회주의자를 중심으로 수용되었으나 1939년을 넘기면서 쇠퇴의 길을 걸었는데 이는 본토인 일본에서의 수명과 비례하는 것이었다. 제국 일본이 동남아와 남태평양으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대동아’ 개념에 의한 대동아공영권이 등장하게 되자 동아협동체는 사라질 운명이 되었다. 물론 대동아공영권이 동아협동체가 내포하고 있던 논리를 확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일본열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와 동남아를 동심원적 계열구조를 갖는 이 구상은 당시 독일에서 유행하던 지정학 논리(지정학적 운명공동체론)에 근거한 것이었다. 동아(일-만-지)가 공유하는 문화적 가치를 근거로 공동체를 구성하겠다는 기존 협동체논리는 구미의 제국주의적 압제로부터 해방을 위한 권역의 건설, 따라서 일만지 3국의 물적 구조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는 대동아 논리로 전환되었다(임성모 2005).

전향 사회주의자의 결정적인 실패는 국제정세의 오판에 있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동아협동체론은 중일전쟁에서 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일본의 승리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중국을 품으면서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전략의 성격을 띠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지식인들은 일본의 승리가 임박한 것으로 크게 오판하고 있었다. 이는 전향 사회주의자뿐만 아니라 민족진영도 마찬가지이었다. 예컨대 고노에 제2차 성명에 대해 최린은 장제스 정권이 완전히 지방정권으로 전략한 것으로 단언하고, 최현배나 이광수는 고노에 3원칙을 승전국으로서 일본이 패전국 중국에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등 일본 제국주의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전쟁의 길로 말려들어가는 상황을 오인하였다(이준식 2005, 109).

동아협동체론은 중일전쟁의 근거를 제공하고 중국 국민당정부의 회유를 기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중일교섭이 여의치 않을 때 폐기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었다. 오자키는 동아협동체론이 갖는 두 가지 현실적 약점을 지적한다. 첫째는 중국문제를 파악하는 데 관념적이고 구체성을 결여한 점, 둘째는 자본주의체제 혁신을 추진할 세력의 결성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임성모 2005, 187-188). 실제로 당시 정치세력의 중심에 서게 된 육군은 중국과의 ‘화평공작’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독일, 이탈리아와의 삼국군사동맹 문제에 집중하며 군사외교의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개혁의 주체세력 조직화 역시 기성정당과 구(舊) 재벌을 중심으로 한 현상유지파의 반발과 고노에 내각의 퇴진으로 급격한 퇴조를 보였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중국과 일본사정에 대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셈이 된다.

보다 중대한 오판은 이들이 아전인수격으로 동아협동체를 수용한 데 있다. 이들은 동아협동체론이 민족 간 협동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협동체 논리를 조선 민족에게 적용

하여 민족적 협동의 단위가 됨으로써 일본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는 희망이 그것이다. 전향자들이 내선일체론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맥락이었다.

동아협동체는 더 이상 일본 제국주의가 아니며 자주적 이익과 문화를 갖는 동아 여러 민족 간 공존공영을 주창하나 문제는 과연 조선을 단위/주체로 인정해줄 것인가이다. 미키는 조선을 협동체 내부의 주체로 상정하지는 않았다. 이 점은 쇼와연구회 내에서 동아협동체 개념이 중국민족주의의 거센 저항과 마주한 과정에서 탄생한 것임을 상기하면 명확해진다. 일본과 싸우지 않는 조선에 대한 동아협동체론이 갖는 한계가 명백할 수밖에 없다.

V. 결론에 대신하여

지역질서 건축 비전으로서 동아협동체론은 분명 쇼와연구회가 이룩한 최대의 지적 성과라 할 수 있다. 미키를 위시한 쇼와연구회는 게마인샤프트의 번역어로 협동체를 사용, 새로운 지역질서를 구상하였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었다. 이는 일본이 무력에 의한 일방적 방식으로 지역질서를 조직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시점에서 나온 작품이다. 중국 민족주의의 강렬한 저항 속에서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장차 소련과 총력전을 벌여야 하는 엄중한 상황인식 속에서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이 정책의 성패는 결국 중국의 수용에 달려있었다. 과연 동아협동체론은 중국민족주의와 화해할 수 있었을까.

관건은 일본의 국내체제개혁이었다. 중일전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의 혁신 즉, 동아협동체를 주도하는 일본의 협동체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쇼와연구회의 결론이었다. 오사키 호츠미는 중

국내에서 동아협동체를 진정으로 고려하는 이들은 일본의 ‘국민재편성’ 문제의 진척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일본국내의 개혁이 실행되어 협동체론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중국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개혁 추진의 핵심지도자인 고노에 후미마로는 1938년 1월 퇴진하였고 따라서 개혁 추진의 핵심인 쇼와연구회의 정치적 동력도 약화되었다. 자본주의의 근본적 개혁, 민족주의를 초극하는 새로운 보편이념의 창조 노력 대신 황도(皇道)와 일본주의란 특수주의에 기반한 군부와 재벌의 결탁에 의한 팽창주의 노선이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당정부의 입장은 분명했다. “이번 대중국 작전의 목적은 중일 양국간 정치, 경제, 문화의 합작을 기초로 하여 동아시아의 신질서를 창조하는 데 있다고 일본은 말하지만 이것은 한갓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평등한 조건에 기초하여 일본과 합작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았지만 이번 일본정부에 의해 제기된 정치합작은 전적으로 중국의 자유독립국가로서의 신성한 권리를 희생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국민은 끝까지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Fletcher 1982, 144) 중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동아협동체론을 띄우며 외교적 노력을 함께 경주하였다. 국민당정부를 지원하는 영국과 외교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국과도 관계개선 시도를 펼쳤다. 1937년 10월 5일 루스벨트 대통령은 시카고에서 이른바 “격리”연설 즉, “인간사회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는 경우 그 만연을 막기 위해 병자를 격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일전쟁을 일으킨 무법국가(일본)는 타국과 일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고립주의적 외교노선의 변화를 시사한 데 대해, 고노에 내각 뒤를 이어 등장한 히라누마(平沼) 내각은 미국과 관계개선으로 전쟁을 수습하고자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김명식 등 당시 전향파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의 국제정세판단은 여러 오류가 있었다. 이들은 만주사변 이후 일본의 패권 확대에 따라 독립의 희망을 잃어가는 속에서 중일전쟁 초기 전세를 일본의 압도적 우세로 판단한 점, 그리고 이후 1년여 간에 걸친 전선교착과 총력전 지속에 따른 일본의 내부적 부담을 거의 읽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1938년 10월 무한, 광동의 함락 이후 악화일로의 중일관계에 대한 쇼와연구회의 깊은 우려와 달리 전향파는 이를 일본의 결정적 승세로 오판하고 동아협동체를 바로 수용하였다. 더욱이, 1939년 1월 신동아 특집호와 협동체 수용론이 이어지는 바로 그 순간, 정작 일본에서는 고노에 내각이 총사퇴하고 동아협동체가 쇠퇴하는 사태가 진전되고 있었다. 이들은 동아협동체 구상 이면에 깔려있는 일본의 깊은 고민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본의 국내정치가 변화하여 동아협동체 전파의 관건인 국내혁신을 추진한 주역이 퇴장하는 사태의 의미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채, 조선에 가져다 줄 이해득실을 좁게 판단하고 있었다.

요컨대, 조선의 지식인들은 중국이 끈질기게 버티고 영국이 지원하는 상황, 소련이 동진하면서 구조적 압력을 점증해가는 상황, 더 나아가 미국과의 최종전 가능성이 부상하는 상황 속에서 전향의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동아협동체는 이들에게 전향의 명분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1938년은 김명식과 같은 사회주의자들이 버티어나갈 희망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김명식(1938)은 “일미국교의 타진”에서 보듯이 소련의 불개입, 영불미 공조의 불발에 비추어 영미 협조의 가능성과 미일 간 충돌의 가능성을 낮게 보는 등, 국제정치적 상황을 오판하여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말았다.

투 고 일: 2017년 01월 16일

심사완료일: 2017년 02월 02일

게재확정일: 2017년 02월 15일

참고문헌

- 김명식. 1938. “일미국교의 타진” 『비판』 (4월).
- 김명식. 1939a. “건설의식과 대륙진출” 『삼천리』 (1월).
- 김명식. 1939b. “조선경제의 통제문제,” 『조광』 (10월).
- 김명식. 1940. “조선경제의 독자성.” 『조광』 (1월).
- 미키 키요시. 1997. "신일본의 사상 원리," 최원식·백영서 엮음. pp.52-70.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서울: 문학과지성사.
- 변은진. 2013. 『파시즘적 근대체험과 조선민중의 현실인식』. 서울: 선인.
- 오자키 호츠미. 1997. "동아 협동체의 이념과 그 성립의 객관적 기초." 최원식·백영서 엮음. pp.36-51.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서울: 문학과지성사.
- 이준식. 2005. “파시즘기 국제 정세의 변화와 전쟁 인식 - 중일전쟁기 내선 일체론자들을 중심으로.” 방기중 편. 『일제하 지식인의 파시즘체제 인식과 대응』. pp.93-133. 서울: 혜안.
- 인정식. 1939. “동아의 재편성과 조선인.” 『삼천리』 (1월).
- 임성모. 2005. “동아협동체론과 ‘신질서’의 임계.” 백영서 편.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서울: 창비.
- 하영선 편. 2008. 『동아시아공동체: 신화와 현실』.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함동주. 1996. “중일전쟁과 미키 키요시의 동아협동체론.” 『동양사학연구』 56: 157-188.
- 함동주. 1999. “미키철학과 동아협동체론.” 『이화사학연구』 25-26: 107-126.

홍중욱. 2009. “1930년대 동아일보의 국제정세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8: 73-116.

三木清(미키 기요시). 1968. “新日本の思想原理續編—協同主義の哲學的基礎”, 『三木清全集』 17卷, 岩波書店

大久保達正(오쿠보 다츠마사)·永田元也(나가타 모토야)·兵頭徹(효도 토오루) 編. 2004-2006. 『昭和社會經濟史料集成 昭和硏究會資料』 第31-33卷. 東京: 大東文化大學 東洋硏究所

李玉貞(이옥정). 2006. “抗日戰爭期の蒋介石とスターリン”. 西村成雄(니시무라 시게오)·石島紀之(이시지마 노리유키)·田嶋信雄(다지마 노부오) 編 『國際關係のなかの日中戦争』. 東京: 慶應義塾大學出版會.

洪宗郁(홍중욱). 2011. 『戰時期朝鮮の轉向者たち』. 東京: 有志舎.

Crowley, James. 1971. "Intellectuals as Visionaries of the New Asian Order." James Morley, eds. *Dilemmas of Growth in Prewar Japan*. pp.319-373.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Fletcher, William Miles. 1982. *The Search for a New Order*.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Iriye, Akira. 1989. *The Origins of the Second War in Asia and the Pacific*. London: Routledge.

Najita, Tetsuo and H. D. Harootunian. 1989. “Japanese Revolt against the West.” Peter Duss,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 Vol.6. pp.711-77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e Emergence of Community Concept as a Regional Order:

Rise and Diffusion of East Asian Community in Colonial Asia

SOHN, Yul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This work analyzes the international meaning of community in the 1930s East Asia. In order to understand the transformation of community concept from a social to an international one, this analysis explores how *toa kyodotai* emerged in Japan, why it became an international relations concept, and what political consequences it created as it diffused into colonial Korea. Paradoxically, the concept was devised by a *Tenko* (converted) in Japan and accepted by a Korean counterpart who had vehemently fight against Japanese colonialism. Such diffusion was predicated on three considerations: the future of Sino-Japanese War and Tripartite Alliance, potential of Japanese community moving beyond Western liberalism, capitalism and nationalis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oa kyodotai* and Chosun's independence.

Keywords: conceptual history, community, *Toa kyodotai*, diffusion, Sino-Japanese War, Miki Kiyoshi, colonial Korea